

## 작년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1만 건 돌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는 2001년 한해동안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건수가 총 1만328건으로, 87년 9월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업무를 수행한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등록된 프로그램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응용프로그램이 6228건으로 전체 60.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시스템 프로그램이 4100건(39.7%)을 기록했다. 또 용도별로는 과학기술용(27.2%), 사무관리용(18.3%), 데이터통신용(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373건을 등록해 저작자중 가장 많은 등록 건수를 보였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이란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 저작자의 국적·설명 및 소재, 창작년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등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을 거친 프로그램에 한해 우선적인 저작권이 주어진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998년 7259건, 1999년 6815건으로 다소 주춤하던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이 2000년도에 9662건, 2001년도 1만328건을 기록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박연식 위원장은 ‘프로그램 등록건수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은 물론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올 상반기중 프로그램 등록누계건수가 8만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kr 도메인 분쟁조정위 출범

“.kr”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을 위한 ‘도메인 이름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장문철 경찰대 교수)가 공식 출범한다.

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R도메인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내에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표나 서비스 도메인 사용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내면 조정위는 법원에 비해 훨씬 빠른 2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판결을 내려주게 된다.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국내 최고 권위의 도메인관련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정통부의 황철중 인터넷정책과장은 말했다.

도메인관련 피해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사이트 ([www.ddrc.or.kr](http://www.ddr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측은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하는 직접 심리보다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신청서 “답변서” 관련 증명서류를 토대로 한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조정절차를 주로 진행하게 된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등록과정에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선접수 선등록” 원칙에 의한 마구잡이식 등록 행태가 일반화되면서 도메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정위가 공식활동에 들어가면 도메인 무단선점 등 부당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규제가 행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 아파트 “특허따기” 경쟁

‘수건건조기, 침수방지용 펌프, 인터넷 분양...’

주택업계에 특허출원 등 산업체재산권을 인정받으려는 열기가 뜨겁다.

아파트 신평면에 국한됐던 특허출원 추세가 집안에 설치되는 제품과 분양방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쌍용건설은 올해 수건건조기, 바닥절단기, 폐수처리장치, 굴착장치 등 4가지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했다.

수건건조기는 열선과 선풍기가 작동해 수건을 말려주는 장치. 습한 화장실에 수건을 걸어두면 잘 마르지 않고 냄새가 나는 등 비위생적이란 점을 감안한 상품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3단계 절수형 수도꼭지의 실용신안권을 인정받은 바있다. 수도꼭지 제조업체에 실용신안을 빌려줘 짭짤한 수입도 쟁겼다.

현대건설은 지하 주차장 침수를 막는 ‘디워터링(de-watering)’ 시스템에 대해 연내 특허 신청한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크다는 점에 착안한 것. 장마 등으로 주차장에 물이 넘쳐나면 내부에 설치된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퍼낼 수 있도록 했다.

지홍길 현대건설 부장은 “지금까지 4개 단지에 이 기술을 적용해 비용절감 효과가 컸다”고 설명

했다.

분양방식에 대해 재산권을 주장한 사례도 있다. 포스코개발은 지난해 4월 서울 노고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당시 청약에서 계약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분양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이 회사는 비용 절감효과가 큰 이 분양방식의 독점권을 보장받기 위해 특허출원했다.

주택분야에 진출한 중공업회사도 산업체재산권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한진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17건의 특허신청서를 냈다. 삼성물산, LG건설 등 대형 주택업체가 올해 한건의 특허출원 실적도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진중공업은 보온과 방음효과를 높이기 위한 신소재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사 기술연구소 관계자는 “특허등록된 제품이나 공법을 타사에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등 마케팅 전략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매일경제

## 개고기 제품 일단 특허출원... 국민 관심 반영

한국의 보신탕 문화에 대한 외국 환경론자들의 비난에 대해 ‘인종 우월주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개고기를 주 원료로 한 제품의 특허출원이 잇따라 개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3년 2월 ‘개소주 제조법’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모두 13건의 개고기 관련 특허가 출원됐다. 연 평균 1.5건이 특허출원된 셈이다. 종류별로는 건강보조용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개고기 및 보신탕 요리법 2건 ▲ 개고기를 활용한 육류제품 2건 ▲변비 및 여드름 치료제 1건 ▲개소주 제조법 1건 ▲개소주 제조장치법 등 기타 4건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특허출원 제품은 '개고기를 함유한 햄버거'와 '개고기 요리법'. 개고기 햄버거의 경우 조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개고기 요리를 패스트푸드화해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며, 개고기 요리법은 개고기 요리시 인삼을 첨가, 특유의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밀폐용기에 개고기와 대추, 김초, 숙지황 등을 넣어 만든 개소주 제조법도 이미 많은 건강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최근 특허 출원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고기 관련 제품의 경우 특허출원인이 개인이다보니 기술서 작성 내용이 허술하고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많아 실제 특허등록된 사례는 없는 상태"라며 "특히 평가기준이 애매해 특허 심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 저작권자 인정권 관리 신탁관리 단체 속속 출범

음반, 방송연기자, 영상미술 분야 등 저작권자의 인접권을 집중 관리하는 신탁관리 단체가 연이어 출범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나리오 작가협회가 신탁관리 단체로 지정된데 이어 이달 말 음악 저작 인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서희덕)가 출범할 예정이다. 또 방송연기자들도 한국방송실연자 협회(회장 송기윤)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문화부에 신탁관리업 허가를 신청했다.

또 방송미술 분야의 신탁관리 단체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문화부와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현황 = 우선 이달 중 방송연기자들의 저작 인접권 신탁관리단체가 출범한다. 방송연기자들은 이와관련, 지난달 한국방송실연자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으며 이달 초 문화부에 신탁관리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음반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문화부에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신탁관리단체 지정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 시나리오작가협회도 작가의 권리보호를 위해 신탁관리 단체 지정을 받았다. 또 방송미술 분야 종사자들도 신탁관리단체지정을 위해 모임을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어떤 보호를 받나 = 우선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신탁관리단체가 출범하면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될 경우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은 별도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방송프로그램이 비디오로 제작돼 판매될 때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기자들은 판매 수익에 대해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재방송분에 대한 저작권권리도 인정된다.

또 한국음원제작자 협회가 활동에 들어가면 음반사들은 자사음반을 이용해 음악을 제공하는 비행기 "선박" 항만 등에서 저작권료를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술 분야의 경우 그동안 한국문예학술 저

작권협회에서 맡아왔는데 집중 관리단체가 출범하게 되면 방송·미술작가들의 권리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안과제=신탁관리단체 지정 이후에도 이들 권리자들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결 해야할 과제도 적지않다.

우선 요율문제가 대두된다.

사용료 정수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사례 조사가 필요하며 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모든 저작권관련 단체와의 협상도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사용자단체와의 협상절차도 남아있다.

◇ 전망=일단 신탁관리단체의 출범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율문제나 사용자 단체의 반발 등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예상된다. 음반제작사 한 관계자는 “신탁관리단체 지정으로 어쨌든 사용자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지만 관련산업은 특별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 또한 적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전자신문

### “은행신상품 배타적 독점권 첫 인정 무산”

독자적인 은행신상품에 대해 독점권을 주기 위한 첫 심의에서 대상 상품 모두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한 빛은행과 조흥은행이 각각 신상품을 개발해 배타

적인 독점권을 신청했으나 심의 결과, 모두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두 상품 모두 특허법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 이전에 판매되지 않은 신규개발,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한 금융상품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구체적 불인정 사유를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신상품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자체 규약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독자 신상품으로 인정되면 최장 5개월 동안 판매 독점권을 갖게 되고 이를 위반한 은행은 6개월 동안 독자 신상품 심의요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출처 연합뉴스

### 상표출원시 가장 선호하는 계절은 “봄”

상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계절은 ‘봄’이며 기후는 ‘바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194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출원된 상표를 분석한 결과 계절명칭과 관련해서는 ‘봄’이 포함돼 있는 상표가 식품을 중심으로 ‘늘봄’, ‘봄맞이’, ‘봄처녀’, ‘고향의 봄’ 등 173건 출원됐으며 그 뒤를 ‘겨울’(72건)과 ‘가을’(63건), ‘여름’(32건) 등의 순으로 이었다.

가장 많은 상표에 들어있는 기후명칭은 상품류와 관계없이 ‘바람’이 325건 출원돼 2위를 차지한 ‘번개’(136건)를 배 이상 뛰어넘었으며 ‘비’(66건)와 ‘태풍’(39건), ‘구름’(36건), ‘안개’(33건) 등도 많이 출원됐다.

‘바람’이 들어간 상표 중에서는 ‘신바람’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솔바람’ 15건, ‘꽃바람’ 12

건, '돌개바람'과 '하늬바람' 각 8건 등으로 분석됐다.

또 절기명칭과 관련해서는 '청명'이 음료수와 차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46건 출원됐으며 '하지'와 '동지'가 각 6건, '상강'이 5건, '대설'이 1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겨울기후와 관련해서는 '얼음'을 포함한 상표가 32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됐으며 '설원' 15건, '눈꽃' 13건, '눈사람' 11건, '함박눈' 9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심사기준과 정우영 서기관은 "봄이 가진 생동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와 바람이 지닌 시원하고 상쾌한 이미지 때문에 '봄'이나 '바람'을 포함한 상표가 많이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 "이미지 동일하면 유사상표".. 서울지법

모양이 완전히 다른 상표라도 연상되는 이미지가 동일할 경우 유사상표로 상표권 침해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 2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13일 중소식품업체 C사의 대표 한모(68)씨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맥주회사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원 등록한 왕관 모양의 상표와 이후 H사가 등록한 상표 'CROWN' 같은 외관이 상이하지만 통상적인 호

칭과 연상되는 관념이 모두 '왕관'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상표"라며 "H사가 이같은 상표를 원고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식품업체에게 사용 캐 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경제

### "특허는 바이오벤처 경영 핵심"

다가오는 특허전쟁의 시대에 바이오벤처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지난해 10월 '천연물 소재 신약개발'을 주제로 첫번째 모임을 갖고 출범한 '코리아바이오네트워크포럼'이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는 연구개발기업이 가지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인 '특허권'에 대해 특허청 유전공학과 이처영 심사관이 '바이오벤처기업의 효율적 특허전략'을 주제로 바이오산업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미 많은 바이오분야에서 원천특허를 선점당한 국내 바이오벤처의 올바른 특허전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 ■ '특허'는 바이오벤처 경영의 핵심

바이오벤처에서 독자기술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은 인력, 연구개발 아이템과 더불어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단기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이오벤처의 성격을 감안하면 특허권은 벤처기업의 유일한 자산인 셈이다.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기술의 보유여부, 즉 특허권의 확보여부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특허권은 특히 해당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시가 총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바이오벤처들에게 독자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따라서 벤처창업과 생존에 필수요소라고 할 만하다. 특허권이 벤처경영에 있어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벤처는 거의 없는 것이 현재 국내 업계의 상황이다.

### ■ 국내 특허전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심사관은 발표문에서 국내 기업의 특허전략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했다.

첫째, 특허전문인력의 부족이다.

현재 국내에는 급박하게 변하는 바이오분야의 특허추이를 제대로 파악한 전문가의 수가 지극히 작다.

변리사는 많지만 바이오분야을 전공한 사람은 적으며, 특히 최근 동향과 국내외의 특허심사기준에 정통한 변리사는 더욱 드문 상황이다.

바이오벤처기업에서 CKO(Cheif Knowledge Officer)로 영입할만한 인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바이오벤처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둘째, 바이오벤처의 특허마인드 부재다.

무엇이 특허가 되는지, 원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료를 기재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특허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특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바이오벤처에서 작성한 특허명세서 초안을 바이오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변리사가 교정해 출원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전략없이 단순히 특허출원에 의의를 두

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방어를 위한 출원인지, 권리를 팔기 위한(licensing out) 출원인지, 권리의 독점하고 제3자를 배제하기 위한 출원인지 등에 따라 특허명세서의 작성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현재 국내 바이오벤처의 특허출원은 목적에 있어 천편일률적인 부분이 많고, 권리행사가 곤란해 기업의 노하우로 남겨두는 것이 더 좋은 특허도 많이 있다.

바이오벤처들이 특허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변리사 비용등 특허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너무 아끼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분야의 원천기술, 개척발명 또는 확실한 권리행사를 필요로 하는 우량발명의 경우 이 분야에 정통한 변리사가 아니면 제대로 된 권리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다.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 기술에 대해 명세서 및 청구범위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는다면 특허를 받아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특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리사 선임시 중요한 것은 특허비용보다 변리사의 전문성이다.

출처 매일경제

### “바이오칩 원천특허 대응 서둘러야”

‘이제 바이오칩 특허전쟁 남의 일이 아니다.’

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는 바이오칩 특허전쟁이 국내에도 다가오고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특허청이 공동기획·발표한 ‘2001 신기술동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칩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는 애피메트릭스

가 이미 상륙, 2건의 포괄적인 특허를 확보해 놓고 있어 조만간 바이오칩을 들러싼 특허전쟁이 국내에도 상륙할 전망이다.

### ■ 해외 바이오칩 소송동향

바이오칩 관련 해외특허분쟁은 원천기술을 다뤘던 거대 바이오벤처인 애피메트릭스와 옥스포드 진 테크놀로지, 하이세크(Hyseq) 간의 분쟁은 이미 타협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현재 국제적인 관심의 초점은 애피메트릭스가 확보주장하는 원천특허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다. 후발 바이오벤처들이 바이오칩의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애피메트릭스의 특허범위가 너무 넓어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보고서는 특히 미국 인사이트사가 애피메트릭스측에 제기한 미국내 바이오칩 관련 소송 결과가 바이오칩업계 운신의 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 애피메트릭스사의 원천특허는 유효성 소송이 현재 1심에서 진행중”이라며, “현재 일부는 특허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되고 있지만 앞으로의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 ■ 외국특허 국내 이미 상륙

국내에 등록된 바이오칩 관련 특허는 애피메트릭스의 전신인 ‘애피맥스’ 사의 이름으로 2건이 있다.

이 특허는 국내업계에서 바이오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던 91년에 이미 국내에 들어온 것.

보고서는 “이들 특허가 문헌상으로 보면 일정한 밀도를 가진 바이오칩은 제작법에 무관하게 특

허로 보호받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권리범위는 ‘광식각법’이라는 특정 제조기술에 국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말해 국내 바이오벤처들도 독특한 제조법에 의한 바이오칩 특허를 확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보고서 작성자를 맡은 특허청 한현숙 심사관은 “독특한 바이오칩 제조법을 개발했다면 국내벤처들이 독자특허를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애피메트릭스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국내 바이오칩 관련 벤처의 특허전략으로 △효율적인 연구개발투자로 강한 특허권 확보 △벤처, 대기업, 제약사, 학계의 전략적 제휴 △원천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심사관은 “새로운 원천특허의 확보 보다는 기존 바이오칩을 이용한 용과 새 제조법 개발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는 작업에 국내벤처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 자성재료분야의 학술연구논문 과 특허출원과의 연계 관계

국가 출연 연구비의 대부분은 대학 교수나 국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결과들은 연구논문으로 학회지에 발표되고 있다.

자성재료분야의 연구들 역시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는데 2000년 학회지들을 통해 발표된 논문들은 총 305편이었으며 그 중 약 11% 정도가 특허 출원되었다.

- 자성재료는 현대 정보통신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하여 휴대폰, 녹음기, VTR, 캠코더, TV 등과 같은 정보기억매체, 로봇트, 자동차 등과 같은 정밀기계, 전력용 발전기, 모터, 변압기와 같은 전기 기기 등 광범위한 산업기계에 사용되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재료이다. 이러한 용도들에 사용되는 자성재료는 각 용도에 적합한 자기특성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특성과 형태를 지닌 자성재료들이 산업제품에 응용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산업 중 생산이나 기술발전 속도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산업은 정보통신산업과 전자산업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자성재료는 거의 모든 전자·통신제품에 응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소재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 이번 조사는 단지 자성재료분야만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일률적으로 언급하는데는 곤란성이 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자성재료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주로 발표되는 곳은 한국금속·재료학회지와 한국자기학회지이다. 신규성 의제(특허법 제30조)를 고려하여 2000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만 조사하였을 때, 2000년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건수는 총 305편이었으나 그 중 32건인 약 11% 정도가 특허 출원되었다. 우리 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특허출원과 연계시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국가로 살아 남도록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들이 산업체산권인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 등록된 학회는 대략 280개 기관으로 각 기관마다 학회지를 월간 또는 격월간 상태로 발간하고 있다. 학회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 대학의 연구원 및 교수진들이고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다. 이들 대학과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는 9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R&D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특허 출원건수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국내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량을 차지하고 있다.

학술연구는 특허권의 취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술연구가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제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학술연구의 관점에서 연구자의 연구성과는 발명과 특허로 결실을 맺으며 산업계 등에서 활용되어짐으로써 대학의 연구활동 자체를 촉진하고 다시 발명을 왕성하게 하는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술연구논문을 특허출원과 연관되어 그 연구 결과가 국가 경쟁력과 연관되도록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다.

- 그 동안 대학 및 출연연구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허 출원 건수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음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와 이의 지원체제가 미흡하였으며, 연구성과인 기술을 산업계로 원활히

게 이전해 가기 위한 기술이전기관 등의 부재 그리고 논문발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특히 출원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도 교수나 연구원들을 평가할 때, 특히 출원에 대한 고가점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30조의 신규성 의제로 논문발표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있으며,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자금을 지원해준 정부가 특허권을 갖지 않고, 주관연구기관(대학 등)에게 특허권 이양하며, 제도적으로 「기술 이전촉진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 규정(과학기술부 훈령)」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자율적인 운영 등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기술흐름 속에서 종래의 특허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연구할 분야를 모색하여, 연구결과 대상을 특허로서 권리를 확보할 때,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개량기술을 다수 확보하므로, 기술의 진보성에서 낙오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료로부터 약간 벗어 날 수 있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연구개발비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대학교수와 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은 연구결과를 특허와 연관시킬 때 중복투자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특허청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구소에 상기와 같은 제도의 변화 등을 홍보함에 따라, 앞으로 학회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이 특히 출원으로 연관되어 출원량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한다.

발특 2002/2

## 위고 모집안내

【발명특허】 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 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단, 발명칼럼, 판례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4 ~ 6 매(A4)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 : E-mail : pid@kipa.org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업부 TEL (02)557-1077 교)306